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자본 투자유치 촉진방안

정 세 욱

명지대 교수, 지방자치연구센터 소장

1. 문제의 제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금년 3월13일에 발표한 ‘기업환경조사(Business Environment Survey)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서울)의 비즈니스 환경이 경쟁 상대인 홍콩·싱가포르·도쿄·상하이 등 5개 국제도시 중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한국을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거듭 천명해왔다. 하지만 올해 발표된 AMCHAM 보고서는 특히 글로벌 기업여건, 외환(外換)거래, 노동시장의 유연성(柔軟性), 외국인 입·출국 및 이민(移民)제도 등 5개 분야에서 한국이 가장 열악하다고 평가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국자본투자를 국내에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는가는 바

로 그 나라가 기업하기에 얼마나 좋은가와 함수관계에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한국에 투자하기에 얼마나 유리한 기업환경을 만들어주는가가 변수이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기업환경이 어떠하였으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어떠했는가와 그 효과를 살펴보고 외국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한국의 기업환경 변천

가. 1994년 산업연구원, 한국 기업환경 “세계 최하위”

1994년 7월에 산업연구원(KIET)은 임금

<표 1> OECD 29개 회원국 중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

(1997. 3)

분 야	평가항목	한국순위	분 야	평가항목	한국순위
수출활성화지수		5	기업비용지출		26
	수출/GDP	14		법인세율	4
	수출증가율	7		물가상승률	20
	공산품 수출비중	4		금리	22
행정규제수준		29		자본비용	23
	지방정부 기업규제	24		임대료 상승률	15
	중앙정부 기업규제	29		국제전화요금	26
	가격규제	22		임금코스트	28
외국기업 지원환경		29	정보화 관련시설		18
	외국인 직접투자	24		전화 보급률	21
	전략적 제휴	28		PC 보급률	17
	외국어 습득	13			
	자본시장 접근도	29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1977. 3), 보고서

-노동력-땅값-금리-조세-사회간접자본시설-정부지원 및 규제-시장접근 등 7개 항목에 걸쳐 한국의 주요 공단들과 세계의 투자유망지역들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창원-반월-시화공단 및 마산 수출자유지역과 세계적인 투자유망지역인 중국 천진-청도지역, 태국의 방콕근교 공단, 베트남의 호치민시 주변지역, 멕시코의 북서부국경 마킬라도라 지역, 영국의 북아일랜드, 프랑스의 로렌지역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했다. 조사결과 기업환경이 가장 좋은 곳은 영국의 북아일랜드였

고, 다음으로 프랑스의 로렌지역, 멕시코의 마킬라도라지역과 중국의 천진-청도의 순이었다.

한국의 공장부지 분양가격은 태국-중국-베트남에 비해 4~10배, 멕시코의 4배 이상으로 조사대상지역 중 가장 비쌌고, 금리도 한국이 가장 높았다. 정부지원 및 규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베트남을 제외하면 한국이 꼴찌였다. 우리 나라 단순기능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약 1천달러)은 영국 및 프랑스와 비슷했고 중국-베트남보다는 10~30배, 멕시코-태국보다는 2~5배 높았다. 그러나 식비·교통비 등 각종 복리후생

비를 포함하면 영국·프랑스보다 높았고, 임금상승률은 연평균 10%대를 초과하여 세계 최고수준에 근접했다. 도로·항만·전력·통신·용수 등 5개 항목의 사회간접자본 수준은 영국-프랑스를 1백으로 봤을 때 한국이 70~80이었다. 한국기업들은 도로와 항만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았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기업환경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나. 1997년 한국의 기업환경, OECD 29개 회원국 중 23위

1997년 3월에 OECD는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19가지를 5개 분야로 나누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분석해 내놓은 「회원국의 기업경영환경 비교」 보고서에서 우리 나라의 기업경영환경을 29개 회원국 중 23위로 평가했다. 특히 행정규제와 외국기업 유치 환경 등을 최하위인 29위로 평가했다(<표 1> 참조).

행정규제수준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규제, 가격규제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20위권 이하였고, 외국기업 지원환경분야도 외국어 습득수준이 13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전략적 제휴 용이도, 외국기업의 국내자본시장 접근도 등에서 모두 하위권에 속했다. 외국기업 지원환경이 이처럼 열악한 것은 개방경제의 추세 속에서 세계 각국이 외국자본투자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매우 심각한

상태였다. '97년에 우리 나라가 겪었던 경제침체의 원인이 외부여건의 변화 외에 기업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내부요인들이 만연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의 비용지출은 회원국 중 26위로서 법인세율(4위)과 임대료 상승률(15위)이 평균수준 이상을 유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가상승률, 금리, 자본비용, 국제전화요금, 임금 코스트 등이 대부분 하위권에 속하여 우리 경제의 고비용 구조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정보화 관련시설은 18위로 평가되었는데, 개인용컴퓨터(PC) 보급률은 동유럽의 체체전환국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회원국의 평균수준에는 못미쳤다.

다. 산자부, 외국인 직접투자 전년보다 73% 감소

IMF금융지원을 받았던 1998년 1월~2월의 2개월간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3억 2천8백만 달러로 '97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무려 73.5%나 감소했고, 외국인의 제조업투자는 83%나 줄었다고 '98년 3월에 산업자원부가 발표했다. 특히 '97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투자비중도 한국은 2.3%에 불과하여, 경쟁국인 말레이시아(28.5%), 중국(18.2%), 대만(7.3%)보다 크게 뒤졌다.

싱가포르의 컨설팅사인 PERC는 한국의 행정서비스가 아시아 12개국 중 11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홍콩의 「과 이스틴 이코노믹 리뷰」 지는 한국의 투자환경을 미얀마-캄보디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또한 스위스의 IMD는 '97년 세계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의 외국인투자 보호수준을 세계 35위로 평가했다.

외국인의 자본투자가 저조했던 이유는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한 고비용-저효율의 생산구조, 노동시장의 경직성, 투자유치제도의 미흡, 열악한 인프라 수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배타적 자세 때문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98년에 미국 뉴욕과 LA에서 열리는 대미(對美) 벤처투자포럼에 참석하여, 해외자본 유치에 나섰고, 정부는 영국과 말레이시아의 투자유치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투자유치기능을 통합한 '투자유치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라. 한경연, "정부의 시장개입 과잉" 국가경쟁력 28위

IMF 금융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49위까지 떨어졌던 국가경쟁력 순위가 2000년에는 세계 28위로 올라갔다. 2001년에도 2000년 수준인 28위를 지켰지만 향후 경쟁력순위가 더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001년 4월에 발표했다. 우리 나라는 시장이 개방적이지 못하는데 정부가 경쟁촉진노력을 게을리하고, 노동시장규제에 원칙이 없으며, 자본시장규제가 국제기준에 맞지 않아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IMD는 한국의 '외국제품·서비스 개방

성'을 43위로, '정부조달행위'를 44위로 평가하여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로 보았으며, '규제회피·암거래·무자료 거래'부분도 39위로 낮게 평가했다. 또한 '법제도와 운영'(42위), '불공정거래 규제'(32위), '소비자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규제'(45위)부분에서도 조사대상국들 중 하위였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규제의 유연성'이 32위였고, 실업 관련법의 효율성도 27위로 낮아 실업자들이 직장을 찾고 근로의욕을 갖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한국은 장기불황에 시달리는 일본(26위)을 쫓고 있어,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매력적인 기업환경 제공으로 도약하고 있는 싱가포르(2위), 홍콩(6위), 호주(11위), 대만(18위)과 경쟁하기에 어려운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 IMD, 2001년도 한국의 기업환경 49개국 중 43위

2001년에 발표된 스위스 IMD의 세계경쟁력 연차보고서는 한국의 기업환경을 평가대상 49개국 중에서 최하위로 평가했다. 세계 경제자유보고서 2001년도판에서도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123개국 가운데 43위로서 '90년의 37위, '95년의 43위에 비해 향상되지 않았다.

바. 세계경제포럼(WEF)과 미국 하버드경영대학원, 한국경쟁력 23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경제포럼(WEF)이 미국 하버드경영대학원과 공동

으로 연구·분석하여 2001년 10월에 발표한 2001년도 세계 75개 주요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쟁력순위조사에서 한국은 일본과 스페인에 이어 23위에 랭크되어 2000년(28위)에 비해 5단계가 상승했다. 국별 순위는 핀란드가 1위였고, 이어 미국·캐나다·싱가포르·호주·노르웨이·대만·네덜란드·스웨덴·뉴질랜드가 상위 10위였다. WEF는 경쟁력 세부분석에서 한국이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인터넷 사용자와 학교인터넷 접속률, 저축률, 투자율 등 개별항목에서 상위 10위안에 들어 경쟁력 우위를 확보했으나, 기업환경수준에 관한 노사관계와 창업허가 항목이 조사대상 75개 중 72위에 그쳐 경쟁력의 핵심적 저해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금융산업진입도 각각 74위와 73위에 처져 취약요소로 분석되었다.

사. UBS워버그, “해외투자자 한국시장 긍정평가”

그러나 UBS워버그의 리온 브리튼 부회장은 해외투자자들의 한국시장에 대한 시각은 긍정적이며, 요즘의 증시 랠리도 한국경제의 밝은 미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경제신문, 2002. 4. 19). 그는 한국기업들의 경영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이 개선된데다 유동성까지 뒷받침되어 올해와 내년 한국증시의 전망도 밝은 편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89년에 한국에 진출한 UBS워버그는 주요 외자유치거래와 민영화 작업에 참여했고, 향후에도 조흥은행·담배인

삼공사 등 4개의 민영화 작업의 주간사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 한경·현대경제연(研), 외국기업이 본 월드컵 효과 “서비스산업 급부상”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4월15일~22일에 주한 외국기업 113개사를 대상으로 “주한 외국기업이 보는 월드컵의 경제적 효과 전망”을 조사한 결과, 월드컵 이후 한국 내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25.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드컵 이후 외국인 투자전망은 ‘크게 증가(3.5%),’ ‘약간 증가(59.3%)’로 응답하여 외국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외국기업들의 대(對)한국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한 외국기업들의 69.9%는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이 동북아 경제권의 물류 허브(중심국가)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한국경제신문, 2002. 4. 27). 또한 월드컵 대회가 한국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효과로 ‘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진흥(54.1%),’ ‘국내투자와 소비증대(20.5%),’ ‘외자유치 증대(10.7%),’ ‘지역경제의 활성화(6.6%)’ 등을 전망했다. 월드컵이 국내기업들의 경영환경에 가져 올 변화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 상승효과(56.0%)’를 예상했다.

한국의 열악한 기업환경이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개선되어 왔는가를 살펴 본 이유는 우리가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데 장애요인이 무엇인가를 잘 알면서도 이를 고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는가를 밝히고 싶어서이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투자하기를 꺼린 이유가 무엇 인지를 몰라서 개선하지 못했다면 문제해결은 어렵지 않았지만, 그 이유를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똑같은 문제점이 해마다 거론된다면, 앞으로도 문제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인을 알면서도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하려면 정부가 과감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실태와 문제점

2002년 2월말까지 한국에 대한 주요국의 투자건수와 총투자액은 22,375건에 778억 1천6백만불에 달한다(<표 2> 참조). 이를 지역별로 보면 국제협력기구가 2억7천1백만불(0.4%), 미주지역이 295억8천6백만불(38.0%), 아주지역이 232억4천7백만불(29.9%), EU지역이 231억9천8백만불(29.8%), 기타지역이 15억1천3백만불(1.9%)로서 미주·EU·아주지역에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투자액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24억9천1백만불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본(114억4천만불), 네덜란드(101억4천6백만불), 말레이시아(58억8천4백만불), 독일(49억2천6백만불), 프랑스(30억2천9백만불)의 순이었다. 한국에 대한 투자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9년에는 155억4천1백만불이었고, 2000년에는 156억9천만불로서 비슷했으나, 2001년에는 118억7천만불로 투자액이 감소했다.

현재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경영성과를 보면 해외 모기업들의 배당수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자. 유한킴벌리의 올해 배당예정액은 1주당 2,167원, 배당금 총액은 260억원으로 배당성향(당기순익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육박한다. 만도공조는 2000년에 당기순익(492억원)의 60%를 배당금으로 사용했다. 팽코전주는 올해 예상 배당액이 350억원으로 배당성향이 83%에 달한다. 도레이세한은 2백억원의 당기순익중 112억원을 배당금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도 올해 배당금이 160억원(배당성향 28.9%)에 이른다. 이들은 비상장기업이어서 배당수익률을 산정할 수는 없지만 국내기업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한국경제신문, 2002. 4. 16).

여기에 각종 기술사용료 등을 감안하면 국내에 진출한 자회사 덕분에 다국적기업의 본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미국 킴벌리사에 2004년까지 매출액의 2~3.5%를 기술로열티로 지급해야 한다. 르노삼성도 일본 닛산이 파견한 기술인력의 사용대가로 판매가격의 2%와 대당 2만5천~3만엔 판매 때마다 엔진기술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하지만 이를 국부유출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신경영 기법과 신기술 이전,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감안하면 긍정적 요소가 더 크다고 생각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가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제공한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조세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도 당기순익

<표 2> 주요국의 대(對)한국 투자 (2002. 3월 18일)

(단위 : 천/백만불)

구 분	1999		2000		2001		2002.1 ~ 2		누 계 (1962 ~ 2002.2)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국제협력기구	4	17	2	18	1	16	-	-	116	271 (0.4)
미주지역	662	4,192	995	6,512	766	5,584	92	716	5,856	29,586 (38.0)
미 국	554	3,739	802	2,916	658	3,889	75	692	5,123	22,491
캐나다	48	347	54	520	26	1,506	5	18	235	2,676
기 타	60	106	139	3,076	82	189	12	6	498	4,419
아주지역	1,084	4,774	2,702	4,721	2,077	2,922	162	174	12,459	23,247 (29.9)
일 본	392	1,750	615	2,448	591	772	53	129	6,805	11,440
싱가포르	46	414	82	304	58	190	5	1	366	2,349
홍 콩	61	461	68	123	72	746	8	5	536	2,108
말레이시아	76	1,794	151	1,408	117	785	11	17	472	5,884
중 국	323	27	1,165	76	812	70	53	8	2,713	230
대 만	41	32	73	251	31	313	7	12	246	706
기 타	145	297	548	111	396	46	25	2	1,321	530
EU지역	313	6,261	377	4,392	305	3,062	34	273	2,908	23,198 (29.8)
독 일	61	960	112	1,599	62	459	6	3	795	4,926
영 국	55	480	46	84	51	432	3	-	486	1,845
프랑스	50	760	45	607	35	426	3	10	394	3,029
벨기에	9	485	16	165	15	201	2	4	83	905
네덜란드	79	3,322	67	1,768	64	1,245	9	237	564	10,146
아일랜드	14	20	18	49	16	174	3	16	118	1,369
기 타	45	234	73	120	62	125	8	3	468	978
기타지역	110	297	194	47	268	287	18	47	1,036	1,513 (1.9)
합 계	2,173	15,541	4,270	15,690	3,417	11,870	306	1,209	22,375	77,816 (100.0)

주 : 1) 신고기준

2) 1개 사업에 여러 국가가 투자한 경우 각 국가별로 건수를 계상함에 따라 유형별·산업별 표와 건수가 다를 수 있음.

자료 :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

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했다. 노키아티엠씨의 법인세율(주민세 포함)은 13.71%로 같은 규모의 국내기업(30.8%)보다 절반 이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의 기업환경은 외국에 비하여 열악하다. 얼마전 중견기업을 하는 한 친구가 사석에서 행정학을 전공한다는 교수들이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무엇을 하느냐는 핀잔(?)까지 섞으면서 이런 푸념을 털어놓았다.

“선거철만 되면 기업들은 자기 지역구에 투자해 달라는 정치인들의 압력으로 골머리를 앓는다. 그 지역에 투자하면 도저히 이익을 낼 수 없는 상황임이 뻔한데도 정치인들은 제발 투자유치 조인식이나 공장 기공식이라도 해 달라고 졸라댄다. 홍수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 기업들은 어김없이 거액의 수재의연금을 내야 한다. 연말이 되면 평소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각종 자선단체가 기다렸다는 듯 들이미는 모금요청을 모른 척할 수 없다. 정치인들의 내기골프를 접대해야 하고 관료들의 관혼상제를 모두 챙겨야 한다. 한국의 기업들은 온갖 형태의 준(準)조세에 시달린다. 이렇고도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 외국인이 한국에서 기업할 것 같은가?”

국내기업들이 왜 서울을 등지는지, 왜 외국으로 투자선을 옮기려 하는지, 외국기업들은 왜 한국투자를 꺼리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진출해 있는 500대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2000여명의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기업환경조사 특별보고서’에서 한국(서울)의 비즈니스 환경이 경쟁상대인 홍콩·싱가포르·도쿄·상하이 등 4개 국제도시와 비교할 때 가장 열악한 ‘반(反)글로벌 도시’라고 평가했다. 다국적기업인들은 한국이 세금제도의 투명성·형평성과 영어구사능력은 싱가포르와 홍콩에는 못미치지만 도쿄나 상하이보다는 우수하다고 보고 있으나, 글로벌 기업여건, 외환(外換)거래, 노동시장의 유연성(柔軟性), 외국인 입·출국 및 이민(移民)제도 등 5개 분야에서는 한국이 가장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¹⁾ 외환거래규제와 출입국관리는 서울이 상하이보다도 더 규제가 심하다고 응답했다. 서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서도 도쿄와 함께 취약지역으로 꼽혔다. 다국적기업들이 선정한 가장 사업하기 나쁜 지역도 한국이었다. 홍콩·싱가포르를 제외한 한국·상하이·도쿄를 사업하기 좋지 않은 지역(Unattractive place to do business)으로 꼽았는데 이중 한국을 가장 취약(bad)한 지역에 랭크시켰다.

1) 세제(稅制)·외환거래·노동시장 유연성(柔軟性)·국가 이미지·영어 구사능력 등 AMCHAM이 선정한 8개 조사항목에서 5개 경쟁도시 중 한국(서울)이 1위를 차지한 분야는 하나도 없었다.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세제와 거시(巨視)경제환경 분야도 3~4위 수준에 그쳤다. AMCHAM(2002. 3), 「기업환경조사(Business Environment Survey) 특별보고서」.

4. 중국 지방정부의 외국자본투자유치 사례

가. 허베이성(河北省) 탕산(唐山)시 정부의 사례

탕산(唐山)시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난부(南堡)개발구를 조성중인데, 2001년에 110억원을 들여 1일 8만t 처리용량의 대형 폐수처리장을 만들었다. 현재 입주해 있는 88개 기업의 1일 폐수방류량은 3만t에 불과하여 기계·전자·가구의류업체 외에 오염유발업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탕산시는 난부 개발구까지 걸리는 시간을 1시간50분에서 40분으로 단축하기 위해 고속도로건설에 착수했고, 다롄, 칭다오 등을 연결하는 환(環)발해만 순환도로 건설계획을 세우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다. 개발구의 토지가격은 톈진의 1/10에 불과하다. 탕산시는 지난 4월초에 한국의 중소기업인 50여명을 본국으로 초청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적극적이다. 이 자리에서 시정부는 한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난부 개발구에 1백만평(생활구 포함) 규모의 한국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염색·섬유공장 등 오염배출기업도 무방하다는 것이다(한국경제신문, 2002. 4.19).

나. 칭다오(靑島) 룡취안전(龍泉鎮)정부의 사례

칭다오(靑島) 룡취안전(龍泉鎮)정부는 중국 내 개인사업자에게 임대하여 불과 10개

월만에 공장건물까지 갖춘 5만6천여평의 허산(鶴山)공업원을 조성했다. 이 업자는 토지와 부속공장을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외국투자가를 유치할 방침이다. 지난 3월부터는 4만8천여평 규모의 룡취안 공업원 조성을 추진 중인데 이 공업원은 부지조성에 그치지 않고 외국기업이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공장까지 완벽하게 지어주는 것이다. 외자를 조속히 유치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공업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룡취안전(龍泉鎮)정부는 룡취안전의 토지 1천4백만평 가운데 약4백만평을 공업단지로 바꿀 것이라며 한국의 농산물가공, 기계제조, 의류, 경공업 업체들의 적극 유치에 나서고 있다(한국경제신문, 2002. 4.19).

다. 그 외 지방정부의 사례

일부 지방정부는 대규모 투자유치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도 했다. 옌벤조선족자치주 지방정부도 난샹푸 주장(州長)을 단장으로 275명의 유치단을 지난 4월에 한국에 파견했다. 최근 진화시 정부는 한국에서 투자설명회를 갖고 투자기업이 원할 경우 보유중인 1천2백억원(한화)의 재원으로 합작은 물론 대출도 가능하다는 투자유인책을 제시했다. 푸신(阜新)시는 지난 4월의 투자설명회에서 면세조건 확대 등을 통해 15개 업체로부터 508만달러의 투자를 확약받기도 했다. 산둥성 지모(即墨)시 정부는 투자 규모와 업종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기준가격 대비 약 20%까지 낮추는 혜택을 주고, 추가투자 시에는 최고 40%까지 할인해줄 방침이다. 양저우시는 1백만달러 이하를 투

자하는 기업은 협동조합을 결성, 입주할 수 있으며 신기술산업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토지세를 일부 감면해주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라. 중국 지방정부관료들의 행정서비스는 만점

이와 같이 중국 지방정부들은 한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방정부에 주어진 재량권을 활용하여 한국기업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관료들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평가할 때 외자유치실적을 가장 높게 쳐주기 때문이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대체로 만족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난부개발구에 입주한 한 한국기업은 한국에 있을 때보다 생산코스트가 약10% 낮아졌다고 부지를 더 확보해 신발공장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용 장갑을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칭다오 타이에스스포츠도 중국 지방정부관료들의 행정서비스는 1백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극찬했다. 한국의 한 중소기업인은 법보다 외자유치가 우선인 나라라고 말했다. 친(親)기업 마인드라는 관점에서 중국관료들은 좋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한국경제신문, 2002. 4. 09).

5.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방안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제프리 존스 회장은 지난 3월에 발표한 '2002 한

국 비즈니스 환경조사결과에서 “아시아 경제가 중국·한국·일본 세축을 중심으로 굳혀지고 있는데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비용이 높아 다국적기업들이 본부이동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술한 5대 핵심과제를 해결한다면 한국의 지리적 우수성과 우수한 인프라를 발판으로 2~3년내로 20~50개의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지역 본부를 한국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MCHAM이 한국정부에 공식 권고한 5개 개선사항은 ①주민세를 포함하면 최고 40%에 달하는 근로소득세율을 홍콩·싱가포르 수준인 20%대로 낮추고, ②외환의 수취·송금규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며, ③기업의 감원(減員)재량권을 확대하고 의무적인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 프로그램으로 대체하며, ④한국의 글로벌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⑤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 생활사무 등 실질적인 영어회화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AMCHAM 보고서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 등 경제5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우리 나라는 교통·통신 등 인프라와 인력수준이 우수한데도 다국적기업의 비즈니스센터 유치를 위한 기업 환경은 경쟁지역에 비해 크게 뒤진다”면서 AMCHAM이 핵심 5대과제를 지적한 것은 향후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맥을 짚어 준 것이므로 그 실천을 위해 기업은 물론 근로자·국민·정부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선일보 2002. 3. 14). 외국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기업의 '이윤창출'의 동기 보장, 기업을 기업으로 대접해야

외국인들은 기업을 기업으로 대접하는 나라에 투자하려고 한다. 외국기업인들은 본질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때에 한국에 투자할 것이다. 이론상 남들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낳으려는 기업들의 노력 때문에 일자리도 생기고 새로운 제품도 개발된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기업인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에게서 '이윤창출'의 동기를 빼앗아 버린다면 그 나라 경제는 쇠퇴하게 되며, 외국투자자들도 등을 돌리게 된다. 경제자유가 억압된 국가는 경제자유가 보장된 나라보다 1인당 평균소득이 실질적으로 60% 이상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다. 똑같이 1천만원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라도 경제자유가 억압된 나라에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경제자유가 있는 국가에 사는 사람과 비교할 때 소득의 60%(6백만원) 이상을 국가에 고스란히 세금으로 추가징수당한다는 뜻이다. 아무런 자원이 없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외국자본투자자가 많은 이유는 경제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관계부처들은 시장경제를 강화한다면서 시장경제의 꽃인 기업을 못 살게 굴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신나게 뛰도록 밀어주어도 시원치 않은 판에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한다. 거기에는 기업이 잠재적 범죄 집단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기업관(企業觀)이 자리잡고 있다. 정책당국이 이런 저런

제도들을 만들어 기업을 통제하려고 하는 한, 한국경제는 신음하게 되고 외국자본투자유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기업이 이윤창출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 비리기업인들 때문에 모든 기업인들을 범죄집단으로 몰기 전에 법의 심판이 얼마나 물렁했는지를 자성해야 한다. 또한 한국국민은 너무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을 향상시키고, 외국인에게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나. 세제(稅制)개혁

경제5단체는 경쟁지역에 비해 높은 현행 법인세율·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세체계의 전면 재검토 및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외국기업인들도 한국의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는 현재 최고 40%와 30%수준인데 한국이 정상적·효율적인 비즈니스 관행을 정착시키고, 아시아의 경제중심지로 성장하려면 현재 39.6%인 개인최고소득세율(所得稅率)을 싱가포르와 홍콩 수준인 20%선으로 낮춰야 한다고 보고있다. 외국기업인의 자녀교육비, 주택·자동차 등 생활보조비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

다. 행정규제의 철폐·완화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게 하려면 과도한 행정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고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뇌물과 부패고리를 차단

해야 한다. 각종 규제 및 조세혜택과 같은 정책유인들을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가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않도록 제도화하여 뇌물과 부패의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첫째 조건은 경제규제를 가능한 한 없애고 투명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경제와 증시(證市)발전 단계가 높아질수록 정부규제는 시장기능을 마비시키면서 경제 성장과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 접어들 때 시장경제의 원칙을 무시하고 규제를 강화하면 성장이 멈추면서 외국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게 된다. 이런 현상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그레이 베커 교수는 뇌물과 부패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각종 규제와 인가, 공무원의 자유재량권 등을 지적했다. 또한 관료의 자질, 공공부문의 임금수준, 정당의 자금조달 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계속 터지고 있는 뇌물과 부패사건도 행정규제를 해놓고 특정한 자나 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그릇된 관행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외환관리에 관하여는 외환 송금과 수취, 기업 내부거래에 따른 대금결제 등과 관련하여 선진국에 비해 불필요하게 이뤄지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금융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의 자유로운 자금 입·출금을 가로막는 각종 외환거래 규제를 폐지하여 외환거래의 편의를 도모해주어야 할 것이다.

라. 부정·부패의 척결

부정·부패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가장 핵심적인 장애요인이므로 이를 척결하는데 범(汎)국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한국에서 계속 터져나오는 부패와 뇌물사건이 한국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독일의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세계 각국의 부패지수(CPI)와 뇌물공여지수(BPI)를 보면 우리 나라는 두가지 지수 모두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1년에 발표된 CPI지수는 조사대상 91개국 중 42위였고, BPI지수는 19개국 중 18위였다. 조사대상 19개국 중 중국만이 우리 나라보다 높게 나왔다. 특히 뇌물을 주는 쪽인 기업을 대상으로 2년마다 직접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BPI가 최근에는 그 나라의 부패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었는데, 처음 발표된 2000년의 한국 BPI지수는 3.4로 같은 아시아권인 싱가포르(5.7)나 일본(5.1)에 비하여 크게 뒤졌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부정·부패정도는 시장경제 원리가 활성화되지 못할수록 심하게 나타난다. 이런 국가에서는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행정규제와 정치적 영향력에 의한 독점적 이윤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얻기 위해 기업들은 치열한 로비활동을 전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뇌물과 부패가 만연되는 이른바 ‘지대추구형 사회(rent-oriented society)’로 전락하고 만다.

마. 노동시장의 유연성

‘한국의 노동시장에는 원칙과 비전이 없다’는 점이 투자를 고려하는 외국인에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 발길을 돌리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정부가 어렵사리 합의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을 연기한 것이나, 노조전임자의 반대급부를 사용자로부터 받도록 한 것이나, 노(勞)가 적법 절차를 거친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노사정(勞使政)위원회의 의제로 삼는 것이 그 예이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붕괴는 파업노동자에게도 사후적으로 어떤 명목으로든 임금이 지급되던 폐단을 청산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이 국민의 정부가 강조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를 노동시장에서 붕괴시킨 근본요인이었다. 또한 시장원리란 급부를 받은 사람에게서 반대급부를 받는 것인데, 노조전임자의 경우 반대급부는 급부를 받은 노조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사용자로부터 받고 있다. 노(勞)의 과격성도 외국인이 투자를 꺼리게 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최근의 노조투쟁 양상이 군사정권 때로 회귀하는 것도 문제이다.

외국기업인들은 특히 한국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수술해야 할 분야는 노동시장이라고 보고 있다. 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할 경우에만 정리해고를 허용하는 경직된 노동관련 법규와 전투적 노동조합은 외국기업의 한국진출에 중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정리해고 재량권을 강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업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파견근로 대상 및 기간을 확대하며, 의무적인 퇴직금 제도를 없애거나 법인연금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고, 전직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근로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바.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보호

한국회계연구원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의 30여개 항목 중 14개 항목²⁾을 오는 8월까지 전면 개정하여 2003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새 기업회계기준은 국내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경제신문, 2002. 4. 02). 이번 기업회계기준 개정에는 ‘엔론 사태’ 이후 미국이 도입한 회계기준이 반영될 예정이고,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설명서 양식의 기준서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다. 새 회계기준은 실적에 최대한 근접하도록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이 안심하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2) 한국회계연구원은 올해 초에 회계변경과 오류 수정, 중간재무제표, 무형자산, 수익인식, 유형자산, 대차대조표일 이후 발생사건, 금융비용의 자본화, 유가증권, 전환증권 등 9개 항목에 대한 기준서를 공표한 바 있는데, 기준서 공개초안이 마련된 지분법, 재고자산평가, 충당부채, 중단사업과 특별손익, 건설형 계속공사 등 5개 항목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신문, 2002. 4. 02.

엄격히 해석하고 집행해야 한다. 회계법인과 감사대상 기업간의 컨설팅 계약을 할 때 제한을 두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감사보고서 가운데 투자유가증권계정 등 기업들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감리를 하는 부분 감리방식을 활성화함으로써 분식회계 유인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

사. 해외 우수인력의 활용

외국기업인들은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허용과 이민(移民)정책이 매우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1~2년마다 취업허가(working permits)를 다시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관련법규가 외국인력의 국내유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입·출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영주권(永住權)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외국인력이 한국에 들어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 각종 인프라의 개선 및 물류기반의 확충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면 기업의 물류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키워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외국기업들이 제품경쟁력을 갖고 있더라도 물류활동이 시간적·경제적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 저렴한 공동수배송으로 업체별 비용과 공차율(空車率)을 감소시키

고, 장기적으로는 탄탄한 물류인프라를 구축하여 글로벌 물류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수출에 있어서도 선박 화물운송료를 절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해 6월부터 전국 25개 공단에 입주한 1만3천여개 중소기업의 물류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산업단지 공동물류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 사업은 국내 25개 공단의 금융·보험·비즈니스를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동아시아의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산단공은 공업단지공동물류사업이 향후 국내 공단뿐만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육상을 포함한 해운과 항공분야의 물류에 대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출입 화물처리절차도 대행 시스템을 제공하며, 세계적인 물류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자. 영어구사능력의 함양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언어소통능력, 영어실력을 배양하는 ‘정신적 인프라’의 개선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전국적인 영어학습 열기(熱氣)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현장 영어구사력은 매우 낮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영어실력은 매우 낮아 영어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서신이나 e메일을 주고 받거나, 투자에 관심있는 외국인을 접촉하기조차 꺼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과의 의사소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활영어·비즈니스 영어회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향으로 공무원들의 영어실력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차. 글로벌 이미지의 개선

2002 월드컵을 계기로 한국의 인지도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외국기업인들이 보는 한국의 국가이미지(country image)는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 내에 근무하는 외국기업인들은 한국의 기업환경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는데, 외국소재 기업인들은 매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국의 글로벌 이미지가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나쁘게 투영되고 있는 것은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를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조선일보, 2002. 3. 14). 정부는 관계 전문가들로 태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중·장기 이미지 마케팅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싱가포르와 홍콩 등 국가이미지 관리에 성공한 지역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6. 결 론

한국의 기업환경은 경쟁대상국에 비하여 열악한 상황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나라 기업들마저 기업하기가 어려워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를 국내에 유치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월드컵 대회가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한국경제에 많은 승수(乘數)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을 기업으로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업에 감원재량권을 주어 유연한 고용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기업이 외국의 우수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인프라를 구축하여 물류기반을 튼튼히 하고, 한국의 글로벌 이미지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자본투자를 유치하려면 자유시장의 경쟁원리가 통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고, 금라임금코스트 등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며,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에 따른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유인책을 개발하는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개방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자본투자 유치전략과 관련하여 ‘80년대~’90년대처럼 생산기지 유치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R&D)센터, 정보기술(IT)산업 같은 고부가가치형 지식집약형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